

민주 지자치장 후보경선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

여론조사 안심번호 활용, 권리당원 투표 방식 결정 안돼

지방의원 후보자 공천 전원 권리당원 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조사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역구 지방의원의 후보자 경선 방법으로는 권리당원 선거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7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백해련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백 대변인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의 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로 한다"며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선거인단(권리당원 전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국민공천 선거인단)로 구성되는데 투표 조사 결과 반영비율은 각각 50%로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의 경우 안심 번호를 활용하기로 했다. 휴대전화의 가상번호인 안심 번호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권리당원 투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서비스인 케이보팅(K-voting)으로 할 것인지 체육관에서 직접 투표로 할 것인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의 공천은 전원 권리당원 선거로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유권자 수 대비 권리당원 수가 현저히 적은 선거구(당세 취약지역)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방법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공천 심사를 할 때 정채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 방법으로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 예비조사)가 포함됐다.

백 대변인은 "배점 기준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확정하고 나서 시·도당 공관위에

서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며 "공천 심사의 가·감산 적용기준 비율은 역대 선거 기준을 감안해 구체적 기준을 공관위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여성·청년 후보자의 가정과 관련해 "현재 당헌·당규와 역대 선거 기준에서 크게 안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한함), 청년(당해 선거일 기준 만 42세 이하) 후보자는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

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고, 전·현직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는 얻은 득표수의 10%만 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의 심사 기준으로는 정채성, 당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대표성(계층별, 분야별, 직능별) 등이 포함됐다. 백 대변인은 "지방선거대책본부로 확대 개편은 3월 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차후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민평당 원내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의원 정수조정 실패

선거구획정안 처리 무산

여야는 7일에도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또다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별도 회동을 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광역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규모를 높이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사들은 지역별 증원 규모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이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획정안 7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무엇보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광역의원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변경되고 의원정수도 조정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획정 시기도 3개월이나 지나 여론의 시선도 꺾지 않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공방... 민생법안 처리 '빨간불'

여야, 이틀간 격렬한 공방

2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차질

여야가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를 놓고 7일까지 이틀간 격돌하면서 2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이 관련 의혹은 허위라며 일부 다른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받아치면서 법사위법(發) 여야 대치 국면이 2월 임시국회 전반으로 확산할 기세다.

특히 법안 처리의 최대 관문 중 하나인 법사위가 언제 회의를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 처리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도 권 위원장의 사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유일하게 감찰한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를 상대로 감찰을 하려 한다"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자 자식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알파고 노골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위원장직을 하루빨리 사퇴하고 검찰 조사가 당당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법사위 소속인 백해련 대변인은 아예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정 사유를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권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적극 반격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산적한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룬 채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과연 집권당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전날 법사위를 보이콧한 민주당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고발이나 의혹 제기가 있으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퇴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들 준용 씨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부인의 미술품 구매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권 위원장은 안미현 검찰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평창올림픽·개헌·적폐청산 설전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7일 야당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정부 당국자들과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를 앞두고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을 비롯해 정부의 개헌 의지와 적폐청산 활동 등에 대한 날선 지적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분권형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놔두고 법률개정으로도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굳이 개헌을 통해 하자고 주장하면서 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뼉을 엮갈려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나중에 하자고 하면 이렇게 손뼉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서 "과연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약한

개헌을 위해 마치 쇼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총리는 "국회에서 먼저 권력구조 개편안에 합의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개헌안을) 내놓아 봤자 통과가 되겠느냐"고 답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정부여당의 정치보복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모든 잘못을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이번 정부의 행태"라며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적폐를 만들고 있으며, 정부가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여론조사를 봐도 다수 국민이 적폐청산은 올바르게 보고 있다"며 "또, 야당 대표들을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셨으면 좋겠는데 거절당해서 아쉽다"고 맞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 광산구청장 출마 선언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7일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의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광주시 서구의회 사회산업위원장 등 풀뿌리 3대 지방자치 분야를 두루 수습하고 경험해 온 지방자치 전문가"라며 "다양한 정치·행정적 경험과 경륜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며 '일자리 많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교육도시 광산구'로 만들고 싶다"며 "시민의 낮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며 잘사는 시민, 잘사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화와 혁신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며 "신바람 나는 공적사항이 되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부족한 일손을 확실하게 덜어주는

논두렁·밭두렁 보호구

뚝개

- 해마다 반복되는 논두렁 보수작업, 여름철 제조작업 논두렁 보호구 한번 설치로 반영구적으로 완벽하게 해결
- 잡초 및 병충해 예방, 논두렁 유실방지, 확실한 논물관리
- 쌀 개방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확보
- 농촌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가중되는 일손부족, 늘어만 가는 인건비

이제 대풍기업의 **논두렁 보호구**가 시원하게 해결합니다!





특어제품

노동력 절감, 인건비 절약, 친환경 녹색제품

전남 광양시 진성면 청양리 1001-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RPC 앞



경남 함안군 가야면 매안리 1구

비탈진 밭둑에 보호구가 설치된 상태 이외 30여 시·군에 설치



현 장 상 태

로타리 친 후 설치 상태



논물 저장 상태



모낸 후의 논두렁 보호구 설치상태





대풍기업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279 Tel. 031-355-9500 · 02-813-9988 H.P 010-8484-4395